여수박람회 10년, 활용 논란 여전

공론화 추진위 "공론화 과정 꼭 필요…시민 1만1000명 서명"
공공개발 시민연대 "공론화 과정 거치다 또 수년간 표류 우려"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10년을 맞았지만,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안을 놓고 지역 내 논란이 여전하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공론화를 강조해 온 여수세계박람회장 미래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론화 추진위는 공론화를 바라는 시민 1만1000여 명 서명을 공개하면서 많은 시민이 여수박람회장의 역할 결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공론화 전문가, 지역사회 원로, 시민사회, 언론인, 일반 시민 등 20여 명으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주관으로 두 달 동안 4회 TV 토론회 개최와 2개의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추진해 시민들의 집합된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 여수시의회 등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박람회장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김경호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은 4개월이면 충분하다"며 "박람회장이 시민의 뜻과 기대에 맞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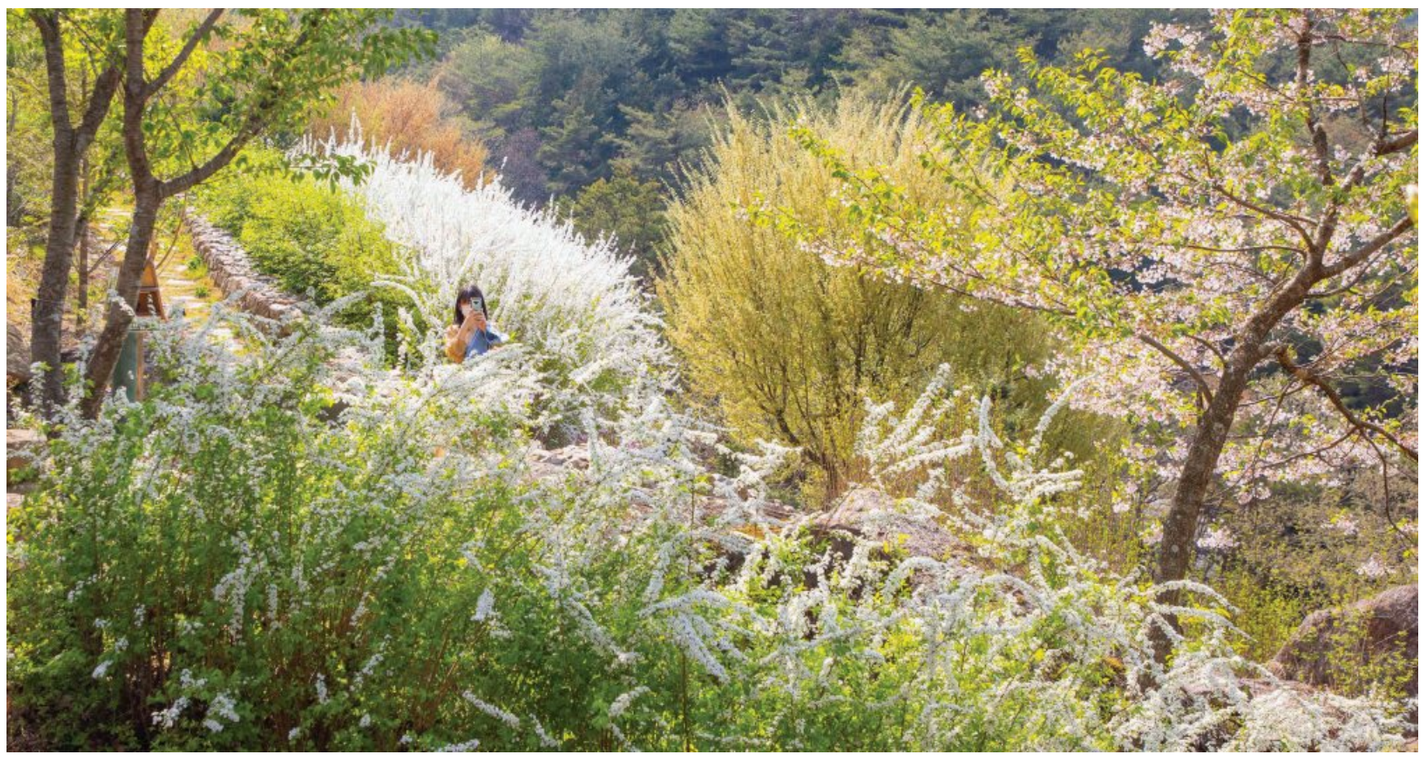
반면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은 자칫 박람회장 미래 결정이 또다시 수년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수박람회장 공공 개발 촉진 시민연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박람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공공 개발의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하자는 것은 지난 10년의 공론과 숙의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수부, 기재부, 전남도, 여수시, 광주전남 국회의원 15명 찬성 발의, 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 지역 70여 직능사회단체가 모여 사후활용 운동을 전개해온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YMCA,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경실련, 여수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 단체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름 속 거닐 듯 구례군 산동면에 위치한 구례수목원에 조팝나무·목련 등 1만 그루의 나무와 화초에서 피어난 꽃이 만발해 탐방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구례군 제공〉

고흥 유자 '면역력 증진' 과학적 효능 입증 나선다

농식품부 공모 선정…인체임상적용시험 착수

고흥의 대표 농산물이자 전국 최대 면적인 58%를 차지하고 있는 '고흥유자'〈사진〉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의 2022년 식품기능성 평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올해 '면역력 증진' 분야 인체임상적용시험을 통해 원료(유자)의 효능 입증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식품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내 농축산물을 활용한 식품 기능성에 대한 인체적용 전(세포·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 및 기능성원료 개별 인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에서는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 유자의 항당뇨, 항비만 효능 입증을 시작으로 십여 년에 걸쳐 인지기능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 항염증, 골다공증 개선 등 유자의 다양한 기능성 효능을 밝혔다.

이러한 인체적용시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해 이번에는 고흥유자 원료의 면역력 증강 식약처 '개별인증'을 최종 목표로 설정,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 신규 개방정원 5곳 선정

도사동 새뜸정원·별량면 미래숲속정원 등 총 41개 등록

순천시가 신규 개방정원으로 신규 등록한 '삼산동 하루를'.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 내 개방정원 5곳을 신규 등록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2017년에 시작한 개방정원 등록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적인 가치가 있는 정원을 등록해 홍보·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매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 현장 심사를 통해 개방정원을 선정해왔다.

올해는 ▲도사동 새뜸정원 ▲별량면 미래숲속정원 ▲낙안면 숙희의 뜰 ▲삼산동 하루를 ▲저전동 소박한 기쁨 정원 등 총 5개 정원을 순천시 개방정원으로 등록했다.

이를 포함해 순천시는 총 41개의 개방정원을 등록해 운영 중이다.

정원주는 정원을 일반에 공개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원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시는 개방정원에 대해 정원 재료비와 홈페이지·SNS 등 홍보를 지원한다. 6월에는 개방정원을 연계한 정원탐방·체험행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시 정원산업과 관계자는 "올해 등록된 5개 정원을 포함한 개방정원들이 순천시의 정원 문화를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등록된 개방정원을 활용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세무서 분리·신설해야"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세무수요 포화·장거리 이동 불편

세무수요가 포화 상태인 광양·구례지역의 원활한 세정 지원을 위해 기존 광양지서를 순천세무서에서 분리해 광양세무서로 신설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광양·구례 지역의 세수나 납세인원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세무서가 신설되지 않아 기업인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광양시의회가 최근 광양지역민들의 국세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칭 '광양세무서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광양시와 광양상공회의소도 지난 2018년부터 줄기차게 광양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광양지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 투자유치 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수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지난 2020년 신설된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조사·납세자 보호 기능이 없는 민원·세원 관리만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의 세무수요 감당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의 세수가 4304억원에 달해 본서인 순천세무서 세수 4667억원에 육박했다.

광양지서 관할인 광양시·구례군은 순천세무서 전체 세수의 45.2%, 납세인원 비중 30.5%, 인구 비중 3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광양지역 기업인과 민원인들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순천세무서까지 최장 50㎞를 이동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관서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 수나 면적 면에서 가장 광범위한 곳이 순천세무서여서 통솔 범위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광양시의회와 상공회의소 등은 "세무서 신설 심의기준에 납세인원과 세수 규모, 업무량, 접근성 등이 고려되는 만큼 광양지역 세무서 추가 설치 요건은 충분하다"며 "급증하는 국세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광양세무서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